

1번 ②

$$\text{실업률} = \frac{\text{실업자}}{\text{경제활동인구}} = \frac{\text{실업자}}{\text{취업자} + \text{실업자}} = \frac{27}{153 + 27} = \frac{27}{180} = 15\%$$

2번 ④

- 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금융자산을 가지는 것이 불리하다.
- ②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함께 나타나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 한다.
- ③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기대인플레이션율보다 높아지면 채권자가 불리해진다.
- ④ 기대와 차이가 발생하면 불확실성이 높아진다.

3번 ③

- ①  $AC = AVC + AFC = 2Q + 600/Q = 80$
- ② 고정비용은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하므로 한계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.
- ③  $AVC = 2Q = 20$
- ④  $MC = 4Q = 40$

4번 ①

소득은 10% 증가한 반면, 수요량은 3% 정도 증가했다. 이는 소득탄력성이 1보다는 작다는 것(비탄력적)을 의미한다. 가격이 일정하므로 지출액의 변화가 곧 수요량의 변화와 같다.

5번 ①

$$\text{수요의 가격탄력성} = - \frac{\Delta Q}{\Delta P} \times \frac{P}{Q} = 4 \times \frac{10}{160} = \frac{1}{4}$$

6번 ④

- ① 물가가 하락하면 같은 화폐로 더 많은 소비가 가능하므로 소비를 지연시킨다.
- ② 인플레이션과 반대 방향으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진다.
- ③ 부의 효과는 자산가치에 따라 소비가 영향을 받는 현상으로 디플레이션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치가 줄어들면 소비가 감소할 수 있다.
- ④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므로 물가상승률이 음(-)의 값을 가져야 한다.

7번 ④

완전경쟁시장의 경우  $P = MC$ 이므로  $100 - 2Q = 20 \rightarrow Q = 40, P = 20$

소비자잉여 :  $(100 - 20) \times 40 \div 2 = 1600$

생산자잉여 : 가격이 한계비용과 같으므로 0이다.

사회적잉여 : 1600

독점의 경우  $MR = MC$ 이므로  $100 - 4Q = 20 \rightarrow Q = 20 \rightarrow$  이를 수요곡선에 대입하면  $P = 60$

소비자잉여 :  $(100 - 60) \times 20 \div 2 = 400$

생산자잉여 :  $(60 - 20) \times 20 = 800$

사회적잉여 : 1200

따라서 400의 차이가 발생한다.

8번 ③

- ① 정부지출 증가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총수요를 증가시켜 물가를 상승시킬 것이다.
- ② 생산비용 증가는 총공급을 감소시켜 GDP를 감소시킬 수 있다.
- ③ 투자의 증가는 총수요를 증가시켜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.
- ④ 정부지출 증가는 총수요 증가요인이다.

9번 ③

$$5\% = 1\% + x + 0.6 \times 5\%$$

$$x = 1\%$$

10번 ①

소비자잉여는 A+B+C+D 감소, 생산자잉여는 A 증가, 정부는 수입이 C 발생하여 총 B+D만큼 후생이 감소한다.

11번 ②

공공재의 주요 특성은 비경합성(소비자가 늘어나도 소비에 제한이 없음)과 비배제성(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음)이다.

12번 ①

- ① 보완재는 교차탄력성이 음(-)의 값을 가지므로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해당 재화 수요는 증가한다.
- ②③④ 수요가 감소한다.

13번 ④

세율 인하로 휘발유 가격이 하락하고 수요량은 증가한다.

14번 ①

- ① 완전고용에서의 실업률은 자연실업률과 같다.
- ② 마찰적 실업은 존재할 수 있다.
- ③ 실망실업자는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.
- ④ 완전고용이라고 해서 실업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. 마찰적 실업 등이 있을 수 있다.

15번 ④

- ① 기펜재는 가격이 하락할 때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드는 재화이다.
- ② 대체효과에 의하면 항상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움직인다.
- ③ 기펜재도 열등재이므로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감소한다.
- ④ 기펜재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다.

16번 ②

- ① 맞는 선택지이다.
- ② 만기수익률과 국채가격은 부(-)의 관계에 있다.
- ③ 유동성 프리미엄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유동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유동성위험이 있는 장기채권에 추가적으로 수익률이 요구된다.
- ④ 재정정책을 위한 재원으로 주로 조세를 늘리거나 국채를 발행한다.

17번 ①

소비자에게 조세 부담이 크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가격탄력성은 작고 생산자의 가격탄력성은 커야 한다.

18번 ③

A에서 B로 이동한 것은 총공급곡선의 좌측 이동, 즉 부정적인 공급 충격 때문이다.

- ① 원자재 가격 상승은 대표적인 부정적 공급 충격이다.
- ② 부정적 공급 충격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져온다.
- ③ 정책적 개입을 하지 않는 경우 총공급곡선이 다시 우측으로 이동하여 A의 장기균형에 도달한다.
- ④ 확장적 정부 정책으로 총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C의 장기균형에 도달할 수 있다.

19번 ②

피셔방정식 : 실질금리 = 명목금리 - 인플레이션을

인플레이션율은 CPI의 변화율이므로 1%

따라서 실질금리는 2%-1%=1%이다.

20번 ③

A국의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려면 B국에 대한 수출 감소, 수입 증가를 유발해야 한다.

- ① 수출 감소
- ② 수입 증가
- ③ 수입 감소
- ④ 수출 감소

$$\Delta k = sy - (n + \delta)k = sAk - (n + \delta)k$$

$$\frac{\Delta k}{k} = sA - (n + \delta)$$

$$\frac{\Delta y}{y} = \frac{\Delta A}{A} + \frac{\Delta k}{k} = \frac{\Delta k}{k}$$

$$s = 0.6, n = 0, \delta = 0.08$$

$$\text{자본의 순한계생산} = MPk - \delta = A - \delta = 0.12 \rightarrow A = 0.2$$

$$\therefore \frac{\Delta y}{y} = 0.04$$

5번 ③

$$M = C + D$$

$$H = C + Z$$

$$\frac{C}{M} = 0.2, \frac{Z}{D} = 0.15 + 0.1 = 0.25$$

$$\frac{Z}{M} = \frac{Z}{D} \times \frac{D}{M} = \frac{Z}{D} \times (1 - \frac{C}{M})$$

$$\frac{H}{M} = \frac{C}{M} + \frac{Z}{D} \times (1 - \frac{C}{M}) = 0.2 + 0.25 \times 0.8 = 0.4$$

∴ M을 25조원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H를 25조 × 0.4 = 10조 증가시켜야 한다.

6번 ④

- ① 평균비용이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기존 기업은 생산량 증가를 통해 가격을 낮춰 신규 진입을 저지시킬 수 있다.
- ② 평균비용이 계속 하락하는 것은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기 때문이다. 이 경우 가격을 한계비용에 맞추면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적어 손실을 본다.
- ③ 평균비용이 계속 하락하려면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아야 한다.
- ④ 경제적 총잉여보다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과이다.

7번 ②

- 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.

- ② 지니계수는 구체적인 소득분포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. 따라서 상위 20% 소득에서 하위 20% 소득을 나눈 값인 5 분위 배율이 다를 수 있다.
- ③ 값이 커질수록 불평등하다.
- ④ 지니계수가 같아도 로렌츠곡선이 다를 수 있다.

8번 ①

$$2\text{년 만기 이자율} : 2\% = \frac{1+x(1\text{년 후 시점 } 1\text{년 만기 이자율 예상})}{2} + 0(2\text{년차 유동성프리미엄})$$

$$x = 3$$

$$3\text{년 만기 이자율} : 4\% = \frac{1+x+y(2\text{년 후 시점 } 1\text{년 만기 이자율 예상})}{3} + 2(3\text{년차 유동성프리미엄})$$

$$y = 2$$

$$\therefore 2\%$$

9번 ③

- ① 생산량의 증가는 저축의 증가를 통해 이자율을 하락시킨다.
- ② 조세의 증가는 저축의 증가를 통해 이자율을 하락시킨다.
- ③ 정부지출의 증가는 이자율 상승을 통해 투자량을 감소시킨다.
- ④ 투자의 증가는 이자율 상승을 통해 저축량을 증가시킨다.

10번 ②

$$\text{총생산증가율} = \text{기술진보율} + \text{자본소득분배율} \times \text{자본증가율} + \text{노동소득분배율} \times \text{노동증가율}$$

$$6 = x + 0.4 \times 5 + 0.6 \times 4$$

$$x = 1.6$$

11번 ④

- ① 고정환율제도에서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경우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할 수 없다.
- ②③ 변동환율제도는 트릴레마와 무관하다. 다만, 자본이동이 자유로울 때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려면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해야 한다.
- ④ 고정환율제도에서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위해서는 자본이동을 통제해야 한다.

12번 ②

- 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유인 제공이다.
- ② 대리인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.
- ③ 보험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는 보험 계약 이후 가입자가 사고 확률을 높이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이다.
- ④ 도덕적 해이는 정보 비대칭이 있을 때 대리인이 본인이 아닌 대리인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여 발생한다.

13번 ①

- ① 가격상한제는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므로 생산자잉여가 감소한다. 가격하한제의 경우 반대로 소비자잉여가 감소한다.
- ②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을 유지하려면 초과공급이 발생하므로 정부가 그만큼 구매해야 한다.
- ③ 가격상한제의 경우 초과수요가 발생하므로 재화 배분이 필요하다.
- ④ 어떤 방식이든 규제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.

14번 ③

- ① 총공급 감소는 물가 상승, 소득 감소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한다.

- ②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명목금리를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시켜 실질금리를 상승시킨다.
- ③ 자기교정적 메커니즘은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인플레이션을, 실질소득 모두 초기 수준으로 회귀한다.
- ④ 총공급 감소의 경우 고용 안정을 선택하는 순간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감수하는 수밖에 없다.

15번 ②

- ① 총수요를 증가시킨다.
- ② 목표인플레이션을 인상은 인플레이션 상승을 감수한다는 것이므로 확장적 정책을 의미한다. 따라서 총수요가 증가한다.
- ③ 총수요곡선은 인플레이션율-실질소득 평면에서 우하향하므로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면 총수요는 증가한다.
- ④ 금융마찰로 인해 소비나 투자가 감소하면 총수요곡선도 좌측이동한다.

16번 ④

인플레이션율을 1%p 낮추기 위해서는 현재인플레이션율에서 과거 인플레이션율을 뺀 값이 1%p 감소해야 한다. 그러기 위해서는 주어진 식에서 실업률이 2%p 상승해야 한다. 따라서 희생률은  $2/1=2$ 이다.

17번 ①

$C=0.6(Y-T)=54$ ,  $G=10$ 이므로 투자는  $I=Y-C-G=36$ 이다.

한편, 주어진 생산함수의 경우 자본소득이 0.3, 노동소득이 0.7의 비중을 가지게 된다.

따라서 자본소득은  $100 \times 0.3=30$ 이다.

18번 ①

- ① 명목금리가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실질금리가 상승하는지가 중요하다.
- ② 테일러 준칙은 대표적인 준칙에 기반한 정책이다.
- ③ 인플레이션율이 1%p 상승하면 명목금리는 1.5%p 상승한다. 피셔방정식에 의하면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값이므로 0.5%p 상승한다.
- ④ 중립 상태라면 인플레이션 갭, GDP 갭 모두 0이므로 명목금리는  $\pi+2$ 이다. 피셔방정식에 의하면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값이므로 2%이다.

19번 ④

- ① 기펜재라면 증가할 수도 있다.
- ② 대체효과는 노트 소비를 증가시키지만 소득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불확실하다.
- ③ 동일한 비율로 가격이 상승한 것은 소득이 감소한 것과 동일한 결과인데, 한 재화가 열등재라면 오히려 소비가 증가할 수도 있다.
- ④ 두 재화의 소비가 모두 감소하면 소득은 늘어나는데 지출액은 감소하여 소득을 남기게 되어 모순이다. 따라서 반드시 적어도 한 재화의 소비는 증가해야 한다.

20번 ③

- ① 변동환율제도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순수출의 감소로 인해 상쇄되어 효과가 없다.
- ② 고정환율제도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환율 하락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외환 매입, 자국 화폐 매각으로 통화량이 증가하여 더욱 효과가 크다.
- ③ 변동환율제도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순수출 증가로 효과가 더욱 크다.
- ④ 고정환율제도에서 평가절하는 순수출을 증가시킨다.

21번 ③

균제 상태 :  $\Delta k = sy - (n + \delta)k = 0$

$$0.4k^{\frac{1}{2}} - (0.15 + 0.05)k = 0$$

$$k = 4$$

황금률 :  $MPk - \delta = n$

$$0.5k^{-\frac{1}{2}} - 0.15 = 0.05$$

$$k = 6.25$$

이를 위해서는  $s = 50\%$ 의 저축률이 필요하다.

- ① 맞는 선택지이다.
- ② 황금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인당 소비는 황금률 상태보다 적다.
- ③ 황금률 상태보다 자본축적이 낮다.
- ④  $k=4$ 이므로 자본의 한계생산은  $MPk=0.25$ 이다.

22번 ②

소비에 부정적 외부성이 발생하는 경우  $SMB < PMB$ 이다. 시장균형은  $PMB = PMC$ 일 때, 사회적으로 최적인 상태는  $SMB = SMC$ 일 때 달성되므로 사회적으로 최적인 소비자 지불가격은 시장균형가격보다 높고 시장균형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균형생산량보다 많다.(바람직한 상태보다 덜 내고 더 소비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)

23번 ④

$$\text{한계 대체율} = \frac{\frac{1}{C_1}}{\frac{1}{(1+\rho)C_2}} = \frac{(1+\rho)C_2}{C_1}$$

$$\text{상대가격} = \frac{1}{\frac{1}{1+r}} = 1+r$$

$$\text{효용극대화 조건} : \frac{(1+\rho)C_2}{C_1} = 1+r \rightarrow C_2 = \frac{1+r}{1+\rho} C_1$$

$$\text{이를 예산제약에 대입하면 } C_1 + \frac{1}{1+\rho} C_1 = Y_1 + \frac{Y_2}{1+r}$$

$$C_1 = \frac{1+\rho}{2+\rho} (Y_1 + \frac{Y_2}{1+r}), C_2 = \frac{1+r}{2+\rho} (Y_1 + \frac{Y_2}{1+r})$$

- ① 시간선호율이 이자율보다 크면 현재소비가 미래소비보다 크다.
- ② 시간선호율이 클수록 미래소비가 효용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.
- ③ 시장이자율이 높을수록 효용극대화하는 미래소비증가율이 높다.
- ④ 시간선호율이 높을수록 한계대체율은 높다.

24번 ④

- ① 주어진 설명만으로는 알 수 없다.
- ② 1원당 한계효용이 같아지도록 소비해야 하는데 지금 망고는 20, 쌀은 10이므로 효용이 극대화되지 않는다.
- ③④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면 쌀 소비를 줄이고 망고 소비를 늘리면 효용이 증가한다.

25번

- ① 불완전정보모형에서 기업의 예상착오가 클수록 총공급곡선이 완만하다. 따라서 확장적 정책에 의한 생산량 증가가 크다.
- ② 반대로 예상착오가 없는 경우 총공급곡선이 수직선이 되고, 이때 확장적 정책은 물가만 상승시킨다.
- ③ 경직적 가격모형에서는 가격이 경직적인 기업이 많을수록 총공급곡선이 완만하다. 따라서 신축적인 기업이 많을수록 총공급곡선이 가파르므로 확장적 정책에 의한 물가 상승이 커진다.
- ④ 모든 기업이 경직적인 경우 총공급곡선은 수평선이 되고, 확장적 정책의 생산량 증가가 크다.